

코로나19 이후 지방자치단체 보건분야 개선 방안

○ 코로나19 발생이후 보건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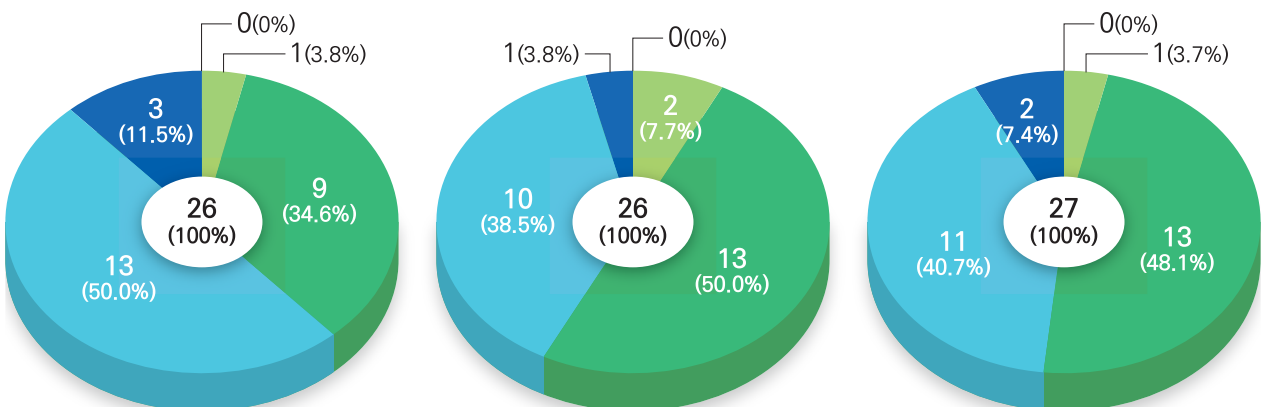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보건소의 기능은 진료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내 건강증진 사업집행 등으로 예측이 가능하지만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역할과 업무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적정기능에 대해 혼선을 겪음

-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공중보건을 위한 11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염병 유행 시 질병예방, 만성질환관리, 식품 및 환경 위생 등과 같은 대부분의 공중보건 기능이 제한됨
- 평상시의 경우,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기존 감염병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소 주도하에 거주 및 직장 환경에 맞춘 감염병 예방 및 교육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그러나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시군구(보건소)는 환자관리반의 운영, 지역 역학조사 및 현장방역조치, 지역환자 감시체계 강화, 환자이송, 접촉자 관리 등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다른 기능보다 감염병 대응기능의 중요도가 크게 높아짐
-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위협을 가하는 감염병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국가 지휘체계를 따름으로 다소 수동적이고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문제도 존재하여 보건소의 본래적 기능수행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짐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8월, 25개 지자체의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원의 설문조사 결과, 보건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하단 <그림 1> 참조)

-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지방자치단체(리커트 5점척도 중 4.1점)가 중앙부처(3.6점)보다 높다고 응답함
- 중앙부처보다 광역단체 주무부서의 보건소에 대한 지원이 더 적극적이었다고 응답함

<그림 1> 코로나19 지역발생 이후 보건소에 대한 지원 충분성에 관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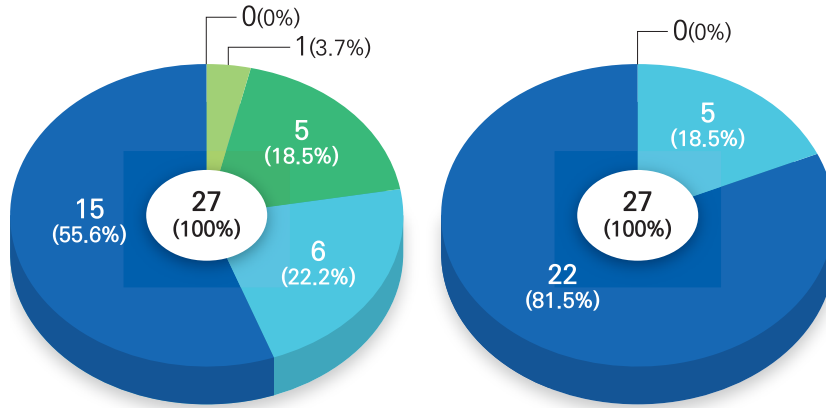
1. 코로나19 지역발생 이후: 광역단체 주무부서의 보건소에 대한 상황대처에 필요한 지원이 충분한 편이다.
2. 코로나19 지역발생 이후: 중앙부처 주무부서의 보건소에 대한 상황대처에 필요한 지원이 충분한 편이다.
3. 질병관리본부의 보건소에 대한 상황대처에 필요한 지원이 충분한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보건소의 감염병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부족이 더해져 보건소의 기능수행의 어려움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함

-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에 대해 긍정의견이 100%로,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적절한 인력규모는 3개팀 이상의 과단위의 증원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77.8%에 이룸
- 인력증원에 대한 현장의 높은 요구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인력을 확대하여 관할 내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려 하기 때문임
- 적정인력배치와 함께 중앙부처의 감염병 대응체제의 재정비를 통해 일선 보건소의 대응능력을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음

〈그림 2〉 감염병 전담조직에 관한 응답



1. 감염병 전담조직의 규모는 적어도 과단위(3개팀 상당)여야 한다.

2. 감염병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위 해서 담당 인력증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선결조건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보건소가 직면한 코로나19 대응의 문제상황

① 조직 운영의 유연성 부족

- 보건소의 인력구성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절대적으로 많은 반면, 감염병관리, 인허가 및 행정업무는 정규직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감염병 유행과정에서 업무조정이 요구되더라도 비일반직(공무직, 기간제)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힘들
- 비일반직 인력은 개별사업 단위별로 채용되는 인력으로 공무원법이 아닌 일반 고용관계법의 적용을 받아, 전염병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종사하는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부여가 어려움

②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발생

-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지방자치단체(분청,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으나 감염병이 장기화가 되면서 지방행정 조직내 업무부담이 가중됨
- 보건소 측면: 방역업무 및 건강증진 사업 등의 기존 보건소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됨
- 분청 측면: 관내 발생상황에 대한 대응과 유관부서 간 업무조정, 재난지원금 지급, 백신대상자의 선별지원 등의 부가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해결방안

인력과 조직확대가 일정부분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현재 인력과 기능의 재조정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함

① 광역단체의 역학조사관 파견을 통한 기초지자체 공중보건 기능 및 진료역량 강화

- 감염병 예방법 상에는 기초지자체에도 '역학조사관'을 두게 되어 있지만, 조사대상 지자체 중 실제로 해당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지리적·환경적 여건으로 해당 전문인력의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역학조사관을 일괄적으로 양성 후 기초지자체로의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② 무보직 6급 인력 재교육을 통한 긴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

- 보건소 내 다수의 무보직 인력은 구성원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여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 전반적으로 조직 내 6급 인력의 비중이 하위직급에 비해 높아, 팀장급 보직과 관련한 인사 적체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따라서 무보직 인력을 재교육을 통해 감염병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고, 감염병 관련 부서의 관리자 보직을 부여하는 방안이 신규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출에 비해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③ 감염병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소 기능의 재정립 시범실시

- 감염병 발생위험이 높은 보건소는 향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시민 교육, 홍보, 학교보건, 병원감염관리 활동 등을 강화하여 조직 및 인력을 개편함으로써 진료기능축소의 기능재편 과정의 우선순위를 부여함
- 보건소 내 인력에 역학조사관 교육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평상시에는 보건소 담당 업무를 수행하다가 감염병 위기 대응 시 직무 전환 후 현장에 투입하여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함

▶ 내용문의 : 최지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033-769-9856, jmchoi@krila.re.kr)

▶ 지난해호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역할(박재희 부연구위원)

원문보기 ▶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brief@krila.re.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